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1월 27일	매 수	총 3 매
		보도일시	국무회의 종료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정 정책과	과 장	이 원 회	☎	503-7578
		사 무 관	신꽃시계	E-mail	flora@mohw.go.kr

위 기 가 정 상 시 구 호 체 계 가 동

- 생활고 비관 자살 등 사회문제 대처키로 -

< 주 요 내 용 >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혼율의 증가(세계 2위), 카드빚·생활고로 인한 자녀 살해, 정신지체 손녀 살해, 가족동반 자살 등 가정 해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 위기에 처한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정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시·군·구별 SOS 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전화(1688-1004)를 개설하는 등 상시신고 및 구호요청체계를 마련하고
 - 긴급 생계급여(1개월), 시설 일시보호(1~3개월), 결식아동 급식 및 방과후 보호 등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강한 가정의 형성·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확충하여 위기유형별 예방 및 조기개입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보건복지부(金花中 장관)는 최근 이혼, 아동·노인학대, 가정 폭력, 신빈곤층 자살 등 많은 가정이 가족보호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정해체를 경험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1천명당 3건으로 세계 2위이며, 자살율은 10만명당 19.1명으로 OECD국가중 4위이다. 또한, 작년말에는 카드빚으로 고민하던 아버지가 남매를 한강에 던지고 할머니가 정신지체인 손녀를 살해하는 등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 그러나, 지금의 복지서비스체계는 가정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데 치중함으로써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단위로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중심의 통합적 위기개입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가정위기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기가정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는

○ 먼저, 위기가정을 상시 신고하고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SOS 상담소를 설치하여 1차적인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기관에 연계하는 한편, 1688-1004 상담전화를 개설할 예정이다.

○ 둘째,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 1개월간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1~3개월간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고 방과후 교육·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셋째,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는 3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내년에는 중앙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2008년까지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의 날(5.15.)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의 확산을 위한 사회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확충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위기가정의 발생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위기가정대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건강성을 회복하고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대책 1부

위기가정에 대한 상시신고 및 긴급구호대책

2004. 1.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1. 위기가정 실태 및 문제점	1
2. 위기가정 지원대책	2
□ 상시 신고 및 구호요청체계 구축	2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3
□ 건강한 가정 형성·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4
□ 위기유형별 예방·조기개입 서비스 확대	4
3. 향후 추진일정	5
4. 각 부처 협조사항	5

《위기가정 개입 패러다임의 전환》

사후 · 개별적 접근 ⇒ 사전 · 통합적 접근

- ◇ 최근 이혼율 세계 2번째, 카드빚 · 생활고로 인한 자녀 살해, 정신 지체 손녀 살해, 가족 동반자살 등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하나,
 - 사건발생 후 요보호대상자별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
- ◇ 향후, 위기 가정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정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시급

1. 위기가정 실태 및 문제점

- 이혼, 아동 · 노인학대, 가정폭력, 신빈곤층 자살 등 많은 가정이 가족보호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정해체를 경험

* 가정위기 요인 변화 추이

- 조이혼율(1천명당 이혼건수) : 1.5('95) → 2.5('98) → 3.0('02), 세계 2번째
- 자살율(10만명당 자살자수) : 19.9('98) → 14.6('00) → 19.1('02), OECD국가중 4번째
- 아동학대건수 : 2,606('01) → 2,946('02) → 2,183('03.9.)
- 가정폭력건수 : 75,723('00) → 114,612('01) → 177,413('02)
- 노인학대건수 : 875('03.11.)

- 경제사정의 악화, 저출산 ·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경제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발생시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 미비
- 가정기능 상실 후 개별적 · 사후 관리에 치중하여 예방 및 가정단위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은 미흡

* 위기 가정 :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간 갈등 · 학대 · 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

2. 위기가정 지원대책

◇ 가정중심의 통합적 위기개입체계 구축(상시신고 및 긴급보호)

◇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및 가정문제 예방서비스 강화

□ 상시 신고 및 구호요청체계 구축

○ 시·군·구별 위기가정 'SOS 상담소' 운영

- 위기 가정에 대한 1차 상담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위해 SOS 전담 공무원 지정
- 긴급보호 등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부서, 민간기관 등에 연계 서비스 제공

* 보건소(244개소), 정신보건센터(119개소), 자살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19개소), 노인 학대상담센터(11개소), 장애인고충상담센터(32개소), 응급의료기관(404개소), 119, 112 등

- 신고처리절차, 유관기관 안내 등 매뉴얼 개발·보급
- 보건복지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통합적 정보제공기능 강화('05)

○ SOS 상담전화(1688-1004) 개설로 접근성 제고

- 발신지역의 시·군·구 SOS 전담자에게 직접 연결
- 공공기관, 철도역사, 버스정류장 등 대중 이용장소에 신고 스티커 부착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조기 발견

- 가정불화, 결식, 학대 등 위기징후 가정에 대한 통·반장(행자부), 교사 및 학생(교육부), 의료기관종사자 등의 상시 신고 유도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긴급 생계급여 실시

-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 1개월간 긴급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비 : 1인가구 15만원, 4인가구 43만원, 1개월 연장 가능

○ 일시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 1~3개월간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을 활용하고, 학대받는 노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춰 전문기관 확충 추진

* 아동일시보호(6), 장애인단기보호(30), 모자일시보호(12), 가정폭력피해자보호(37)

- 지속적인 시설보호 필요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규정을 활용, 최대한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의료·교육급여, 보육료 등 지원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 강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재량권을 부여(16천명)하고, 학교 급식 대상자(39천명)에 대하여 방학중 식사 제공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 교육·보호서비스 제공

- 전국 244개소에 운영비 신규 지원(개소당 월 67만원)

○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복권기금 등 활용)

- 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성·장애인빈곤가정, 조손가정 등에게 긴급생계보조, 일자리 제공,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 실시

※ 현재 파악중인 동절기 위기가정에 대하여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건강한 가정 형성·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 '04년 3개 시·군·구 설치, 연차적으로 확대
- 건강가정사를 배치하여 아동양육, 노인부양, 부부관계, 의식주생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3.12.29. 국회 본회의 통과, '05.1. 시행)

○ 건강 가정 확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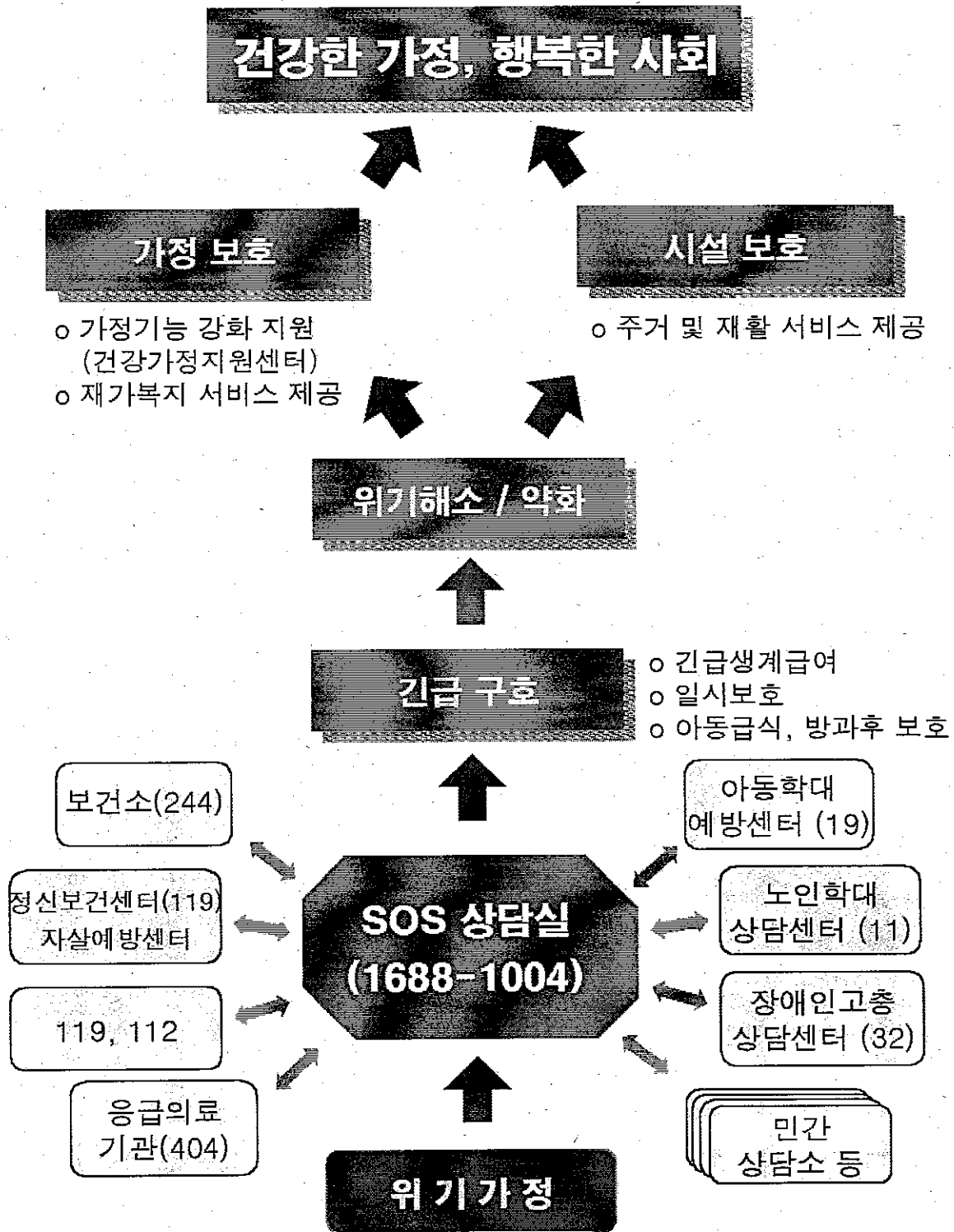
- ‘가정의 날’(5.15.)과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 위기유형별 예방·조기개입 서비스 확대

○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충하여 상담·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

* 2003년 19개소 → 2004년 27개소

- 노인부양 부담완화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확충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07) 추진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상담, 가사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 가정과 지역사회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조기 확충
-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문적인 위기개입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생명의 전화’ 등 관련 민간자원 연계 운영



< 위기 가정 상시 신고 및 긴급 구호체계 >